

모두의 안전, 모두의 행복

국민 삶에 플러스+ 행복안전부



행정안전부

국민주권 정부는 약속을 지키고, 국민의 뜻을 정책에 담습니다

지시사항

전체 **166**건 중 **138**건 추진 완료
(완료율 **83%**)

지시내용

조치사항

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

→ 전 지방정부 2,053명 채용·운영
우수지역 인센티브 등 부여

휴가철 안전사고예방 철저

→ 물놀이 안전요원 증원(+439명)

혐오 현수막 대응

→ 가이드라인 시행 및 정비 확대
(옥외광고물법, 정당법 개정 추진 중)

공정거래 분야 인력 증원

→ 가맹유통심의관 신설 등
공정위 대폭 증원(+167명)

외부 반복 지적사항

민원 및 국회·언론·감사원·시민사회 의견을
적극 검토하여 제도개선 등 조치

지적내용

조치사항

에스컬레이터 안전 이용문화 정착

→ 국민 의견수렴(모두의 토론회,
8월 말) 거쳐 방안 마련

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

→ 일제 현장점검(상하반기) 시행,
「지방보조금법」 개정

공공부문 인공지능 도입 지원

→ 공공AI 윤리기준(안) 마련 및
도입활용 가이드 배포 완료

환경미화원 적정 임금 조사

→ 임금실태 전수조사 완료,
관리 강화 등 개선 추진

주요성과

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사회를 구현했습니다

선제적 총력대응으로 인명피해 최소화

- ✓ 겨울철 대설·봄철 산불
인명피해 Zero(0)
- ✓ 축제·공연 등 다중운집 행사
인파사고 Zero(0)
- ✓ 지방정부 대응역량 강화
* 현장인력 715명 증원, 인센티브 확대



재난 피해자 보호와 일상회복 지원 강화

- ✓ 시설복구·경영안정 지원 확대
* 추가지원 117억 원
- ✓ 생활지원금·치유휴직금 지급 등
지원 강화
- ✓ 재해복구사업 신속 추진
* 95.7%(7.31. 기준)



국민 안전권 보장을 위한 법·제도 정착

- ✓ 생명안전기본법 제정
* 국민 안전권 명시, 사고원인 독립조사를 위한
위원회 설치 규정 등
- ✓ 이태원참사 피해자 보호를 위한
법적 근거 마련
* 2차 가해 방지, 피해자 장기추적 연구 등
(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개정)



선제적 재정 운용으로 중동전쟁 비상경제 상황을 돌파했습니다

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민생안정 버팀목 마련

- ✓ 피해지원금 6.1조 원 신속 지급
* 11일 만에 지급률 90% 달성, 소상공인 매출 10.6% 증가
- ✓ 거동 불편 주민 대상 '찾아가는 신청'으로 빈틈없이 지원
* 총 28.9만 건(비수도권 24만 건)



중앙-지방 합동으로 지역물가 집중 관리

- ✓ 지방정부 중동전쟁 비상경제대응 TF 구성(3월)
* 지방정부별 물가·기업·소상공인 관련 애로사항 파악·해소 지원 등
- ✓ 바가지요금 점검·캠페인 실시, 지방공공요금 인상 최소화

행정안전부

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세상, 함께 만들어요.

바가지요금 이렇게 신고하세요!



누구나 쉽게, 바가지요금 신고는 이렇게!

전화 지역번호 + 120 또는 1330

온라인 관광불편신고

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신고 게시판

유의사항

▶ 신고 시 영수증, 사진, 구체적인 일시 및 업체명 등 객관적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



관광
불편신고
바로가기

먼저 찾아가는 AI정부, 성과로 증명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했습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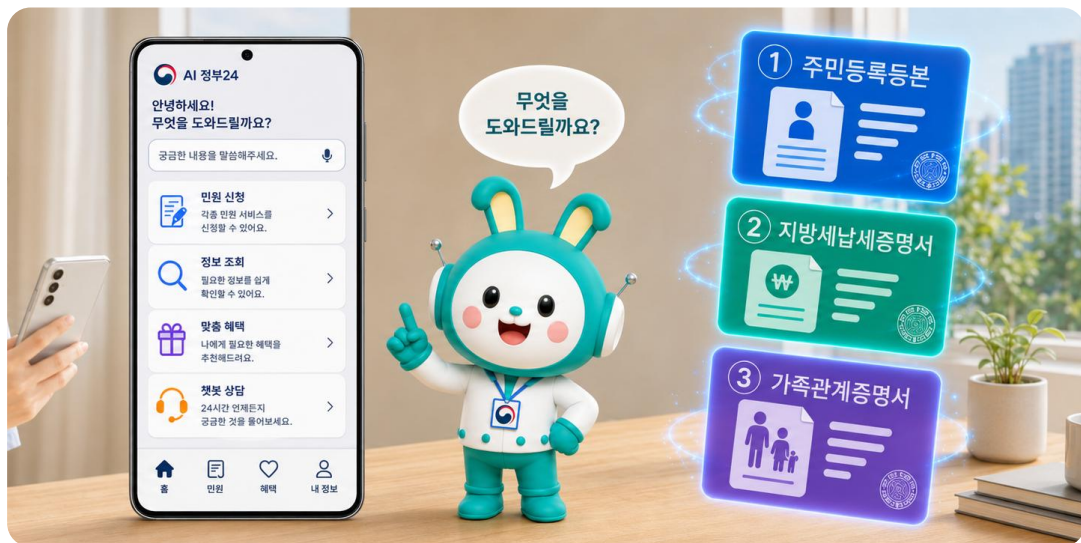
AI 정부 대전환 통한 대국민 공공서비스 혁신

✓ 대화기반 AI 정부24·AI 국민비서 개시

* AI 정부24 민원 10,080종, AI 국민비서 긍정반응 89.8%(123대 국정과제 추진실적, 5.26.)

✓ 정부 내 AI 공통기반 운영 및 실무자 AI 역량 강화

* 모델·인프라·데이터 기반 마련, AI챔피언 500여 명 양성



공직혁신과 성과보상으로 유능한 정부 구현

✓ 정부 최초 AI 친화적 행정문서 도입(3월)

✓ 우수공무원 특별성과 포상 및 정부 신뢰도 대폭 상승

* 중앙행정기관 2,324명, 34억 원 지급 / OECD 정부 신뢰도 '24년 15위 → '26년 6위

OECD 주요 회원국 중앙정부 신뢰도

2024년		2026년	
국가명	순위(30개국)	국가명	순위(33개국)
스위스	1위(61.94%)	스위스	1위(61.57%)
룩셈부르크	2위(55.56%)	대한민국	6위(51.03%)
핀란드	7위(46.99%)	호주	7위(50.61%)
...	...	...	...
대한민국	15위(37.15%)	일본	11위(45.96%)

일상의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고 공정의 원칙을 세웠습니다

일상 속 편법·불법 관행 근절

- ✓ 하천·계곡 불법시설 전수조사 및 정비기준 마련
* 불법시설 91,264건 적발 및 19,550건 정비(7.31. 기준)
- ✓ 지방선거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로 선거질서 확립



정부포상 영예성 회복과 권력기관 정상화

- ✓ 12·12 군사반란 가담자 등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
* 반헌법 행위자 등 188명(219점) 취소(7.21. 기준)
- ✓ 중수청 설치를 위한 법 제정으로 정상화 기반 마련



사·도 통합과 지방우대로 균형성장의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(7.1.)

✓ 전남광주통합특별시법 제정

*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, 각종 특례 385개 부여

✓ 인구 320만, 비수도권 최대 경제권으로 출범



지방 균형성장 지원

✓ 지방우대지수 설계 및 지방세제 차등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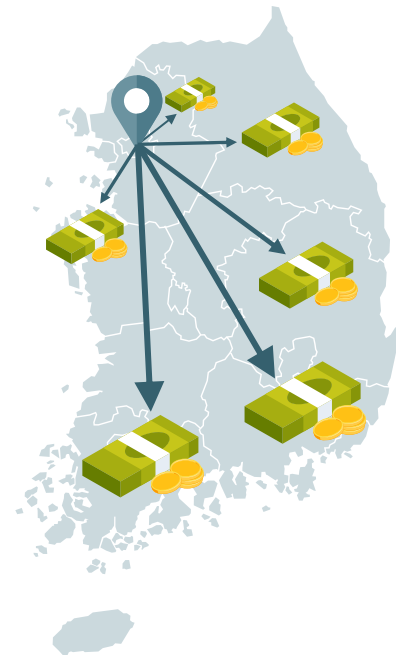
✓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마련(6.30.)

* 20개 부처, 146개 과제

지방우대지수



서울에서 멀수록 두텁게 지원



역점 과제

민원 처리는 똑똑하게, 국민과의 소통은 활짝 열어놓겠습니다

복잡한 민원을 한번에, 알아서 처리

✓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 실시(8월)

* 예) 시군구청 영업신고, 세무서 사업자 등록을 한번에 신청

✓ AI 맞춤형 민원혜택서비스 확대

AI정부24



대화형 민원서류
발급 등 기능 고도화

AI국민비서



민간앱 연계 국민연금
조회·신청 등 추가

자동 혜택 신청



요건 충족 시 자동 혜택
신청(시범개통, ~12월)

✓ 쏙 지방정부 원스톱 전담조직 확대 및 민원 전담인력(베테랑공무원 등) 보강

국민이 주인되는 정책참여 생태계 구축

✓ 국민 주도 정책참여 거버넌스 구현

오프라인

모두의 토론회

국민참여 숙의로
생활 접점 정책의
사회적 공감대 형성

온라인

모두의 광장

AI를 활용, 누구나
손쉽게 제안하는
공론화의 장 마련

법 제정

시민참여기본법

숙의공론화보장,
위원회 설치 등
통합 추진체계 마련

✓ 행정혁신 확산 및 정보공개 실효성 제고

최초·최고 국민 체감
혁신 사례 인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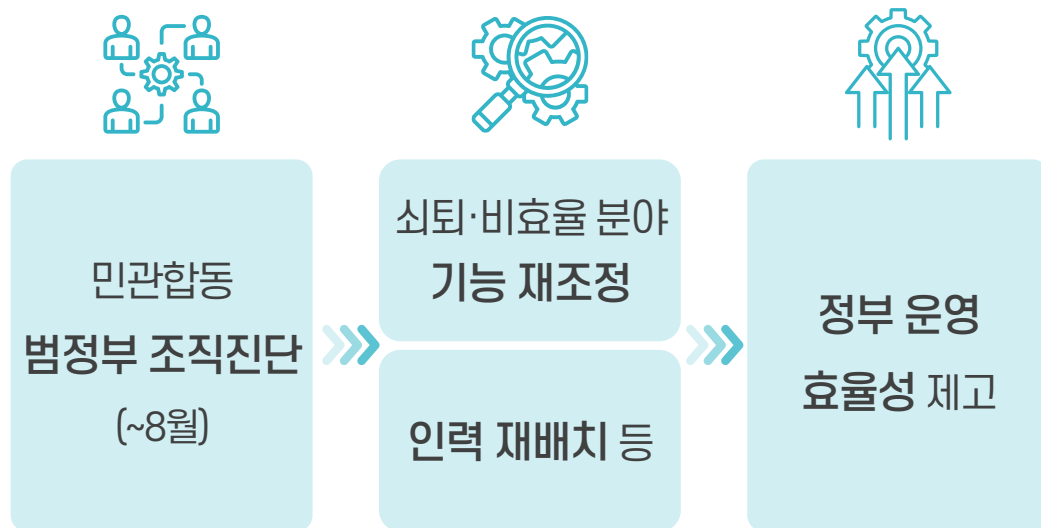
공직문화 개선 및
혁신 평가·점검

비공개 대상
정보 구체화

전략적 정부조직 기반 위에 AI역량을 더해 유능한 정부가 되겠습니다

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직운영 혁신

✓ 정부 기능 재조정 및 적재적소 인력 배치



✓ 주요 국정현안 대응을 위한 기구·인력 신속 지원

* 미래 성장·국가경쟁력 확보·국민안전·비정상의 정상화 등

AI 업무환경 혁신과 시스템 안정성 강화

온AI 확대

지능형 업무관리플랫폼 확대
(47개 중앙행정기관, ~12월)



AI정부실험실

공무원 AI 개발 환경 제공



AI 전문가 양성

공직 AI 전문가 2만명 양성(~'30)



안정성 강화

기준 강화, 복구체계 설계·구축



지방자치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 주민주권을 실현하겠습니다

지방행정 투명성과 주민신뢰 제고

주민소환 확대 ✔ 투표권자 19세 → 18세
 ✔ 청구·개표 요건 완화

**주민참여
모니터링** ✔ 지방행정 모니터단 운영

**재정·조직
투명화** ✔ 지방재정·조직 운영 공개

지방의회 책임성과 역량 강화

의원 책임성 강화

✔ 공무국외출장 정보공개 확대
✔ 이해충돌방지 의무 규정



역량 강화

✔ 조례입법평가 제도 도입
✔ 예산안 심의기간 확대



조례부터 예산까지 주민주도 자치 구현

**주민자치
종합계획** ✔ 종합계획 수립(~12월)

**주민조례
입안지원** ✔ 주민이 조례안 작성 시
 전문가 자문 제공
 ✔ 청구요건 완화

**주민참여
예산 확대** ✔ 주민제안사업 증액 추진
 '25 8천억 원 → '30 **3조 원**(목표)

사회연대경제로 공동체를 살리고, 함께 누리는 기본사회를 만들겠습니다

사회연대경제로 살아가는 지역공동체

- ✓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과 공공 판로 확대
- ✓ 햇빛소득마을 확대와 발전사업 인허가 간소화
* 연 700개, 총 3,000개(~30년) 이상 조성 목표
- ✓ 사회연대금융 기반 조성 새마을금고 맞춤형 금융 확대
- ✓ 주민주도 지역문제 해결 활동가 육성·마을공동체법 제정
- ✓ 청년 일경험·청년마을·마을기업 육성으로 지역 활력 제고
* 청년 일경험 2천명, 청년마을 61개소(누적), 새마을형 마을기업 시범 선정

지역 우수사례 청년마을 홍천 와썹타운

소멸위기 품앗이 마을 MZ 핫플로 재구성

빈집 등 청년거점공간 전환 + 창업 지원

청년 유입·체류·정착 선순환 구조 구축



모두의 삶을 보듬는 기본사회

기본법 제정

- ✓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 등 추진방향 제시 및 추진체계 규정을 위한 「기본사회 기본법」 제정
- ✓ 기본사회위원회 운영으로 분야별 정책 총괄·조정

지역 확산

- ✓ 지방정부 대상 기본사회 실현 가이드 배포(8월)
- ✓ 지방정부 기본사회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(4분기)

튼튼한 생명안전의 토대 위, 한 발 앞서 위험을 막아내겠습니다

생명안전 정책과 지역 대응기반 강화

법 체계

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(~'27)

사회재난대책법 제정

지역 역량

민선 9기 단체장 재난안전교육

지방정부 안전관리 책임성 강화

안전시설 확충

소방안전교부세 지원

('25 9,856억 원 → '26 1조 503억 원)

안전산업 육성

투자펀드 100억 조성, 판로 개척

예방R&D 145개·979억 원 추진

AI·데이터 기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

재난데이터 학습

풍수해 데이터
15만 건 AI 학습



위험탐지 AI 모델

침수탐지·약취유인
탐지 모델 개발



가뭄 통합정보

재난데이터 기반
가뭄정보 구축



위치기반 국민안전24
서비스 제공(12월)

맞춤형 안전정보

신고문안
자동 작성·분류

AI 안전신문고



드론(영상·위치)
데이터 활용

현장-상황실 연계

계절별 재난부터 일상 속 위험까지, 현장 밀착형으로 대응하겠습니다

풍수해

24시간 대응

24시간 상황관리
(5.15.~10.15.)

주민대피체계

주민대피지원단
전국 운영

빗물받이 정비

TF 구성 및 사전 집중 점검
(점검·청소 702만 회)



폭염 피해

취약노인 관리

생활지원사(3.7만 명)
주기적 안부확인

취약사업장

건설현장 등
수칙 준수 현장점검

무더위 쉼터

주민센터 등 쉼터 확대,
폭염 시 운영시간 연장



수상안전

인력 확충

안전요원 증원
(5,831명 +439)

장비 확대

구명조끼 무료대여소
운영(606개 +483)

현장책임 관리

전담공무원·
지역책임관 운영



산불·화재

산불 대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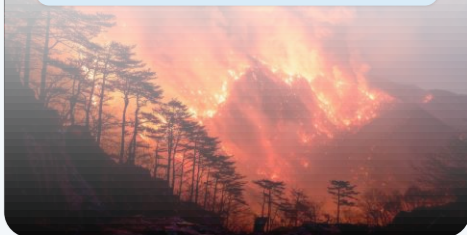
대응 점검·합동훈련
(9월)

화재취약시설

노후주택 등
취약시설 점검(10~12월)

화재 예방

노후주택 연기감지기
우선 보급(~12월)



보행안전

통학로

초등학교 통학로
148개 개선

보행환경

보행자 우선도로 확대
('25년 324개 + 연10% ↑ 목표)

돌진사고 예방

고강도 볼라드 도입
(9개 지역 시범설치, ~12월)



개혁·지방주도 성장 과제

수사의 전문성은 높이고 민주적 통제는 강화하겠습니다

중대범죄수사청 출범(10.2.)

직제·임용령
제정(8월)

☑ 수사관 이체 및 전문분야 외부인재
채용으로 우수 인력 충원

정보시스템
구축(9월)

☑ 경찰청 KICS 개편 활용
☑ 중수청 KICS 신규 구축 추진('27~)

청사 마련(9월)

☑ 본청 서울청 포함 및 지방청(5개)
입지 확정 및 입주 준비

경찰 수사 개혁 추진

국가경찰위
실질화

☑ 민주적 통제 기능 강화(행정위원회 격상)
☑ 수사 인권 감찰·조사기구 설치

기관 간
견제장치 마련

☑ 보완수사 요구 시 신속·철저 이행
☑ 사법경찰관 비위 엄정 수사(중수청)

수사역량
기반 뒷받침

☑ 증원·자체 재배치 통한 수사인력 보강 지원
* 증원 143명, 재배치 2,144명 기 시행('25.6.~)
☑ 범죄피해자, 여성·청소년 등 보호 기능 강화

모두가 안심하고 신뢰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

미래 대비 방재기준 강화

기후변화에 따른 강화된 목표 적용

기 존

50년 빈도재해 대비

예 시
강우량 **92mm/h**

강 화

100년 빈도재해 대비

예 시
강우량 **110mm/h**

예방계획 반영



방재사업 적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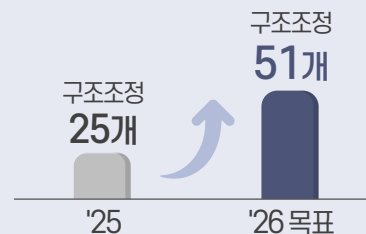
이행 여부 점검

부처 협력으로 방재기준 **실효성 검증** 및 분야별로 **일관성** 있는 세부기준 운영

새마을금고 신뢰회복

건전성 확보

- 연체채권 정리
- 부실금고 구조조정 추진
- 관계기관 합동 특별관리 TF 지속 운영(~12월)



공공성 회복

- 사회연대금융 연계 전용상품 출시(2,000억 원 대출, ~30년)
- 저신용자 대상 대안신용평가 도입(비금융데이터 활용)

튼튼한 지방재정, 활력있는 지역경제로 새로운 도약을 이룰 것입니다

재정분권과 자치재정권 강화

자주재원 확충

국세·지방세 비율 7:3 달성

지방의견 반영

대규모 지방비 수반 사업은
기획단계부터 의견 수렴

교부세 투명화

보통교부세 산정기준·결과 공개

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소비·투자 선순환

상품권 발행 확대



미사용포인트 전환

신용카드 등 미사용포인트
상품권 전환(관계부처 합동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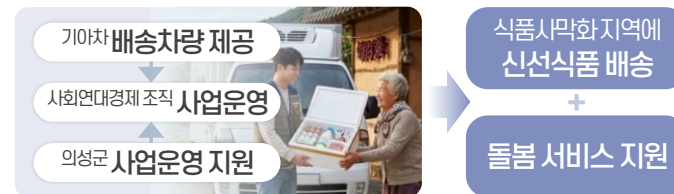
경영평가 반영

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시
상품권 구매 반영(지역상생협력 지표)

비수도권·인구감소지역 성장 지원

- ✓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 완화와 인구활력⁺ 지역 지정·운영
- ✓ 지방우대지수로 재정사업 특례 발굴 및 지방세 차등 지원
- ✓ 고향사랑기부·기업 협업으로 지역 활력 확산

[우수사례] 신선식품 배송 사업



국가정상화 과제

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정의로운 미래로 도약하겠습니다



“부당한 공권력으로 국민의
생명·자유를 침해한 범죄는
끝까지 단죄해야 할 것” ‘26.4.13.

부적절한 정부포상 적극 발굴·취소

- ☑ 간첩조작·국가폭력 가해자·반헌법 행위자 정부포상 신속 취소
- ☑ 재심 무죄사건 선제 파악으로 관계기관 포상 취소 지원

국가폭력·과거사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 지원

- ☑ 선감학원 등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11건 관계부처 공식사과
- ☑ 간토사건 진상규명·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총리소속 위원회 설치

신뢰를 깨뜨리는 반칙과 편법을 바로잡겠습니다



“부정 결탁과 짬짜미 반칙으로
사익을 편취하는 민생의
손톱 밑 가시는 뽑아내야” '26.5.12.

하천·계곡 불법시설 원상복구

- ✓ 자발적 철거 유도, 비협조 시 대집행, 재발 우려지역 집중관리
- ✓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마련(「하천법」, 「소하천법」 개정)
- ✓ 정비 시 생활SOC 사업과 연계하여 공공성·지역상권 회복
- ✓ 상행위 재발 우려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집중 지속 관리

혐오·비방 현수막 차단

- ✓ 혐오·비방성 정당현수막 정비 확대·법령해석 지원으로 현장 대응 강화
- ✓ 옥외광고물법·정당법 개정으로 근원적 방지책 마련

재정누수와 불공정 계약을 바로잡아 지방재정을 정상화하겠습니다



“지방정부도 체납관리단을 만들어야” '26.1.20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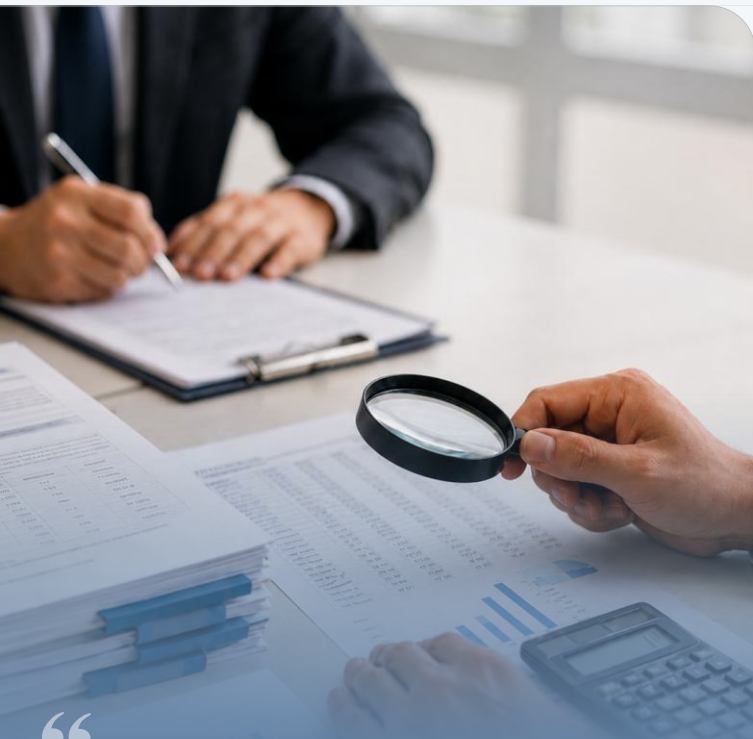
✓ 체납·부정수급을 끝까지 추적해 숨은 재원 환수

- ✓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 및 고액·상습 체납 관리 강화
- ✓ 지방세외수입 체납 시 가산금 부과 신설 등 제재 강화
- ✓ 행안부-지방 합동으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고위험사업 등 집중 점검
- ✓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기준 확대 및 제재부가금 상향(기존5배 → 최대 8배)

✓ 페이퍼컴퍼니 근절과 공정계약 확립

- ✓ 입찰보증금 환수 강화·적격심사 현장점검으로 페이퍼컴퍼니 난립 방지
- ✓ 단가계약 의무구매 폐지로 지역 간 가격경쟁·지방계약 공정성 제고

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바로잡아 책임 행정을 확립하겠습니다



“각 부처 감사 기능 강화해야”

“지방정부 부정부패 각별히
신경 쓸 것” '26.5.20.



범정부 감사역량 강화

- ✓ 28개 중앙부처 감사인력 63명 확충으로 자체감사 역량 강화
- ✓ 종합·예방적 감사체계 구축 지원



현장 중심 지방공직기강 확립

- ✓ 민선 9기 첫 지방정부 합동감사 추진(하반기 중 광역 지방정부 3곳)
- ✓ 휴가철 기강점검(7~9월)·불공정 업무처리 및 소극행정 감찰(10~11월)

안전불감증 공사관행을 근절하겠습니다



“안전보다 돈, 효율을 중시하는
못된 관행이 여전...
철저 조사 필요” '26.5.28.

노후교량 붕괴 재발방지

- ✔ 정부합동 안전등급 D·E 교량 115개소 전수점검 실시
- ✔ 붕괴 위험도 등 고려, 지방정부 철거·신설·보수 재난특교세 지원
* [E등급] 총 21억원(3개소) 즉각 지원 / [D등급] 지방정부 교부 요청에 따라 연내 지원
- ✔ 국토부 제도개선·노동부 건설현장 관리 등 부처합동 재발방지 대책 마련

대규모 지하개발 안전 사각지대 해소

- ✔ 영동대로 지하공간·GTX-A 삼성역 정부합동점검 실시
- ✔ 위험요인 현장조치 및 점검결과 관계기관 통보

피해자 권리보장과 일상 회복을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



“참사 생존자와 유가족의
목소리를 더욱 세심히 듣고,
국가의 책임을 다할 것” '26.6.25.

진실규명부터 기억·치유까지 국가책임 강화

- ✓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 설치로 독립적 사고조사체계 마련('27)
- ✓ 이태원참사 피해자 유형별 회복프로그램 운영, 정부 공식 기억식 개최(10월)
- ✓ 오송참사 3주기 추모행사(7월), 월 1회 소통창구 운영·심리상담 비용 확대

재난피해자 중심 현장 통합형 전담지원체계 확립

- ✓ 범정부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제도화
- ✓ 지방정부 자체 피해자 지원 전담기구 설치 근거(조례) 마련

국민체감 플러스+ 과제로 불편은 줄이고 안전은 높이겠습니다



“작은 것, 할 수 있는 것을 시도 때도 없이 치열하게 해주어야 변화가 있을 것”

일상은 더 편하게



생활은 더 안전하게



경찰청 업무보고

'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K-치안'을 구현하겠습니다

상반기 주요 성과

- ❑ 지시사항 47건 中 40건 완료(85%)
- ❑ 외부 반복 지적사항은 제도개선 등 적극 조치
- ❑ 민생범죄 엄정 대응 및 국민안전 확보(보이스피싱 피해 50% ↓, 불법사금융 검거 23% ↑, 관계성범죄 유치 결정 62% ↑)

범죄와 반칙 엄단, '정상사회' 실현

- ❑ 보이스피싱, 마약 등 초국가범죄 대응 고도화
* 특별단속 * 법제 정비 * 인터폴 아·태사무국 유치(29년)
- ❑ 민생경제범죄 척결에 수사역량 집중
* 전담수사체계 구축 * 범죄수익 추적·보전
- ❑ 가짜뉴스, 2차가해, 디지털성범죄 엄정 대응
* 상시 모니터링 * 관계부처 합동, 수사 및 삭제·차단
- ❑ 사회 곳곳의 비위와 반칙 해소
* 토착비리, 대포차, 보복대행 * 체납 교통과태료



'국민생명' 중심 경찰활동 집중

- ❑ 범죄로 인한 살인 예방 및 대응 강화
* 스토킹 등 관계성범죄 관리 강화 * 순찰 고도화
- ❑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 총력 대응
* 보행자 등 맞춤형 대책 * 도로환경개선(~'31년, 2천 개소)
- ❑ 위기 가정·대상자에 대한 따뜻한 법집행
*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* 경미범죄심사위 활성화
- ❑ 일터·생활 속 국민 안전 확보
* 중대재해 엄정수사 * 국민체감감제(14개) 추진



국민이 신뢰하는 '경찰수사 새신'

- ❑ 내부비리 상시감시 시스템 구축
* 준비속 상피제 * 내부비리수사대 * 감찰 강화
- ❑ 민주적 통제 및 기관 간 견제·균형 강화
* 인권·감찰 조사기구 * 수심위 실질화 * 상호 협조 강화
- ❑ 경찰 수사 역량·전문성 제고
* 수사인력 보강(+2,800여명) * 인적관리 강화
- ❑ '경찰 수사 개혁위원회'('26.7월~)
* 외부위원 중심 구성 * 주1회 이상 회의



소방청 업무보고

더 빠르고, 더 안전하게 국민의 일상을 지키겠습니다

상반기 주요 성과

1 재난현장 골든타임 도착률 향상

✓ 68.3% → **70.3%**

* 소방헬기 현장 도착 15.1분 → **10.3분**



2 화재로 인한 국민 피해 저감

✓ 화재건수 **5.97% ↓**, 사망 **15.7% ↓**



3 봄철 산불, 피해 확산 총력 저지

✓ 국민 재산피해 **99% 감소**(사망자 0명)

* 산불 진화시간 **58% 단축**



4 국민이 함께 이용하는 국립소방병원

✓ **종합병원급**(19개 진료과목, 302개 병상)

* '26.6.8. 개원, 충북 음성



핵심 추진과제

역점
과제

국민과 소방관의 안전을
더욱 두텁게 지키겠습니다

지휘역량 강화

119시스템 고도화



첨단장비 도입

소방산업 육성

개혁
과제

일터에서의
화재피해를 줄이겠습니다

✓ 소방점검·시설 기준 강화

* 스프링클러, 자동확산소화기

✓ 전국 공장·창고 실태조사(~'27)

✓ 자체소방대 교육 내실화

국가
정상화
과제

고위험산모·중증외상환자를
신속·안전하게 이송하겠습니다

✓ 전국 단위 병원 선정·즉시 이송

현 재



지역 중심

개 선



전국 병원 네트워크 연계

현안
과제

여름철 재난에
선제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

✓ 신고 폭주 대비 상황실 기능 강화

* 신고접수대 334 → 908대, 2.7배 증설

✓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(275개소)

✓ 피해예상지역 장비·구조대 사전 배치

**모두의 안전, 모두의 행복을 위해
국민께 한걸음 더 다가가겠습니다**



행정안전부



경찰청



소방청